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|---|---|
|  국토교통부 | <h1>보도자료</h1> | |  |
| | 배포일시 | 2019. 3. 29(금) 총 4매(본문3) | |
| 담당 부서 도시경제과 | 담당 자 | • 과장 배성호, 사무관 지봉현 • ☎ (044) 201-3737 | |
| 보도일시 | | 2019년 4월 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31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 | |

전자발찌 범죄, 전국 CCTV로 잡는다

- ◆ 국토부, 스마트시티센터-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연계시스템 구축
- ◆ 1일부터 대전 지역 전자발찌 범죄 피해자 구조에 CCTV 활용
- ◆ 올해 안으로 서울, 광주시 연계시스템 구축...내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

□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·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.

* 전자발찌 착용('19.2, 3,089명)에도 불구하고 '18년 94건의 성폭력, 살인, 유괴 등 발생

| 지금은... | 앞으로는...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자발찌 부착자 이상징후 알람 시 관할 보호관찰소 직원이 GPS 신호추적 신병확보 → 관리인력 과다(1인 331명), GPS 오차, 전자발찌 훼손, 출동시간 등으로 소재 확인 및 검거에 애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스마트시티센터에서 인근 CCTV 영상, 도주경로 등을 지원받아 신속 검거 → CCTV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확인과 검거 등 상황대처에 효과 |

○ 이러한 CCTV 영상 활용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CCTV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.

* 공공보유 CCTV 95만 대('18.4, 행안부)를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 시 약 19조 원 (CCTV 대당 설치비 2천만 원×95만 대)의 안전자산 취득 효과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는 지난 1월 31일 법무부와 성 범죄·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이에 따라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*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**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.

* 지자체가 방법·방재, 교통,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CTV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·통합 운영하는 센터

**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(성폭력범, 미성년자 유괴범, 살인범, 강도범)의 위치확인, 이동경로 탐지, 전자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수신자료 관리 센터

○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,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,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,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.

○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.

○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,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*하는 전자장치 훼손,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(통상 00:00~06:00) 위반, 출입금지 구역 진입,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.

*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(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)

**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된 자만이 접속
토록 하며, 망 연계 솔루션을 사용하여 망을 분리해 구축할 계획

-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AI(인공지능), IoT(사물인터넷),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구호, 범죄예방,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폭 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- 한편, 국토부는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 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.

<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현황 >

- ◇ (국토부-경찰청 MOU, '15.7) 납치·강도·폭행 등 112센터 및 출동경찰 지원
- ◇ (국토부-안전처 MOU, '15.9) 화재·구조·구급, 긴급 재난상황 119 지원
- ◇ (국토부-SKT 등 통신사 MOU, '16.7) 아동·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긴급상황 지원
- ◇ (국토부-과기부·서울시 MOU, '17.11) 클라우드 기반 서울시(25구청 포함) 도시 안전망 구축
- ◇ (국토부-민간보안 MOU, '18.3) 민간보안(에스원·KT텔레캅 등)과 공공안전 연계
- ◇ (국토부-법무부 MOU, '19.1) 전자발찌 범죄로부터 미성년자, 여성 등 보호

-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“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‘눈(CCTV)’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”며,
 - “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,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지봉현 사무관(☎ 044-201-373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스마트시티센터-위치추적센터 연계 서비스

□ 서비스 개요

- 전자발찌 훼손, 금지행위 발생 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신속히 상황 파악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을 제공

□ 기대효과

| 지금은… | 앞으로는…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자발찌 부착자 이상징후 알람 시 관할 보호관찰소 직원이 GPS 신호추적 신병확보 → 관리인력 과다(1인 331명), GPS 오차, 전자발찌 훼손, 출동시간 등으로 소재 확인 및 검거에 애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스마트시티센터에서 인근 CCTV 영상, 도주경로 등을 지원받아 신속 검거 → CCTV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확인과 검거 등 상황대처에 효과 |

□ 서비스 시나리오

- ① 전자발찌 부착자가 금지행위 시 위치추적센터에 알람 발생
- ② 스마트시티센터에 GPS 위치의 실시간 CCTV 영상을 요청·확보
- ③ 위치추적센터는 현장상황 파악 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동 명령
- ④ 스마트시티센터는 현장 상황을 지속 추적하여 출동 보호관찰관 지원

